



2021 관세청 조직개편



개편의 배경

지난 50년간 우리청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유기적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

- ▶ 수출산업 지원을 위한
수출국 신설('73)
- ▶ HS, 新평가협약 도입에 따른
평가협력국 신설('83)

중화학공업 육성, 시장 개방

1970-80

- ▶ 신속성과 정확성의 조화를 위해
화물 Process 업무와
非Process 업무를 구분
→ 통관 · 심사 · 조사감시('00)

국제수출경쟁 격화, 물류대란

2000

1990

불법무역 증가, 개방 가속화

- ▶ 부정무역 수사강화
심리기획관 → 조사국('96)
- ▶ 대외협력 전담부서
평가협력국 → 협력국('96)

2010

FTA 무역시대, 중국시장 부상

- ▶ FTA 국내이행체계 마련을 위한
FTA집행기획관 신설('11)
- ▶ 중국 수출기업 지원역량
강화를 위한 인천세관 통합('16)

?

2020

개편의 배경

오늘날 관세행정을 둘러싼 환경변화 분석 → ‘안전 · 데이터 · 비대면 · 보호무역주의’

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외국發 위험요소



- ◆ 지속되는 감염병 위기 등 해외에서 유입된 위험요인에 의한 사회안전 위협 상시화
- ◆ 국민안전을 위한 의약품, 보건용품 등 안전수단의 적기공급도 매우 중요

4차산업혁명과 데이터경제 시대



- ◆ 신기술의 빠른 확산에 따라 전산화 · 정보화 흐름은 AI 기반의 ‘지능화’로 진화
- ◆ 데이터 보유, 활용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 부각

전자상거래 등 비대면경제 보편화



- ◆ 비대면 방식이 산업 전반의 ‘뉴 노멀(New Normal)’로 변화
- ◆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보편적인 무역패턴으로 자리잡으며, 개인이 주요무역주체로 등장

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기조



- ◆ 각국의 관세 · 비관세 조치가 경제안보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 증가
- ◆ 코로나19 이후 시장 안정화, 디지털 무역 선점 등을 위해 국가 간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

분야별 개편 개요



통 관 감 시

- ◆ ‘신속통관’ 목적에 따라 구분되었던 **통관-감시** 기능을 **재편 : Targeting & Monitoring**
- ◆ 관세국경의 ‘**끊김 없는**’ 실물관리를 위해 **통관-감시** 간 연계 강화

정 보 데이터

‘98년 ‘정보관리관 + 협력국 → 정보협력국’ 이후 지속된 이질적 기능의 혼재 해소

- ◆ 관세행정 데이터 · 신기술 개발 업무의 **추동력 확보**
- ◆ 국내기업지원과 국제세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**국제통관분쟁** 해소를 통합하여 **시너지 유발**
- ◆ **대외협력(FTA+非FTA)** 업무를 통합하여 **통상이슈 대응 전문성 강화**

협 력 FTA

심 사

- ◆ 성실신고지원-관세조사 · 단속 기능을 **구분**하여 **통해 부서별 업무목적**을 **명확화**
- ◆ **국내산업보호** 및 **유통안전**을 위한 **사후심사**(반덤핑조사, 원산지표시 · 지재권 단속) **내실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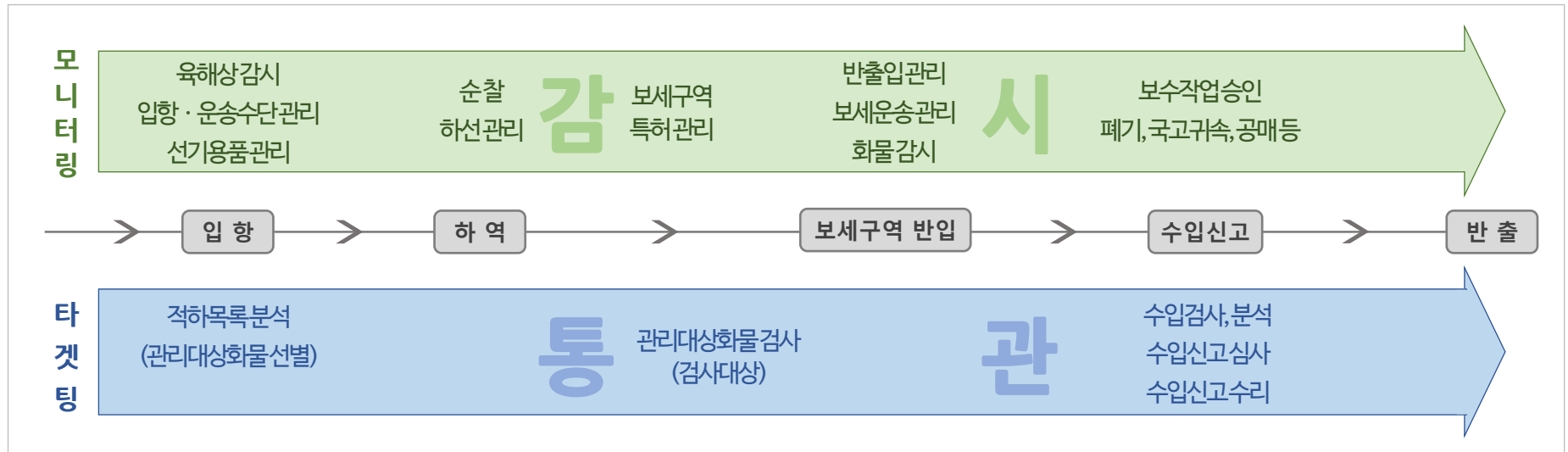
조 사

- ◆ 수사부서의 **정체성**을 명확히 하고, 지능화되고 있는 **무역기반 자금세탁** 대응력 **집중**
- ◆ 국민안전과 밀접한 **환경범죄 · 마약범죄** 수사기반 **강화**

통관 · 감시 개편안

수출입현장 업무에 해당하는 통관 · 감시를 연계하여 '끊김 없는 실물관리'를 실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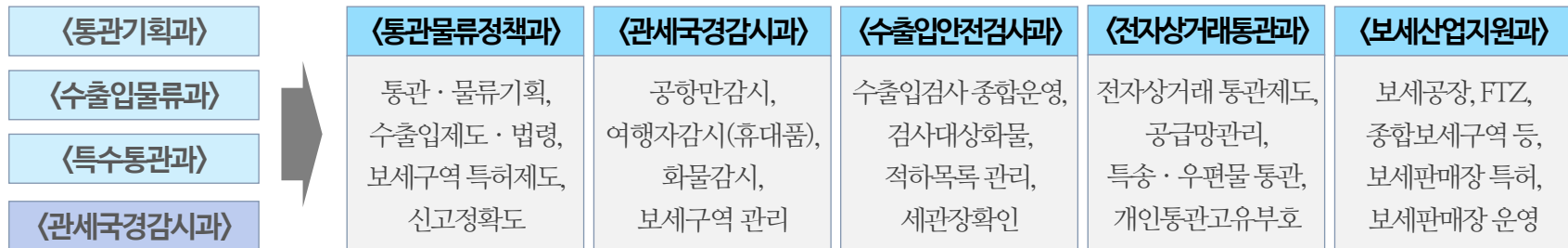
- ◆ '통관'은 검사 업무를 기초로 위험요소의 타겟팅(Targeting)에 집중하고, '감시'는 수출입현장의 구역 및 화물흐름의 모니터링(Monitoring)을 전담하도록 구분
- ◆ 하역 前後로 업무영역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, 전체 화물 프로세스에서 통관과 감시 기능이 상호보완적으로 병행되도록 정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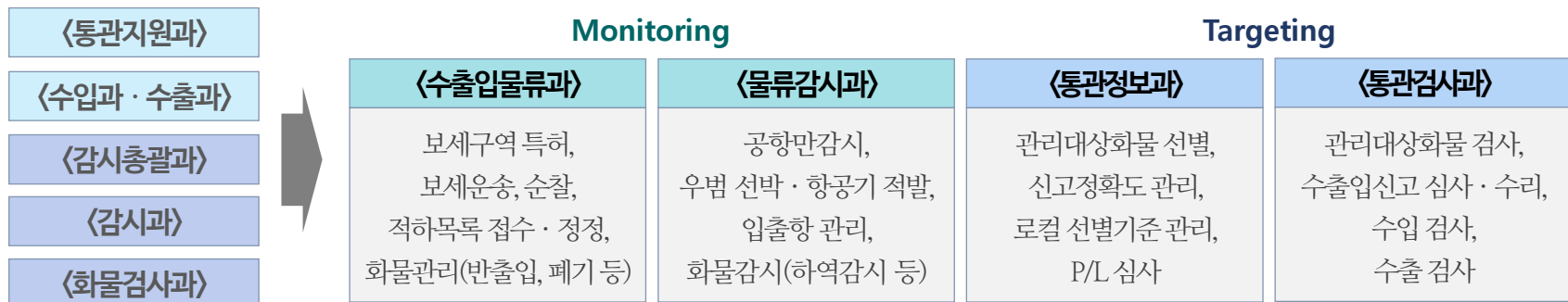
통관 · 감시 개편안

정책 · 제도를 담당하는 본청은 기능 통합, 현장을 운영하는 세관은 각 기능을 전문화

- ◆ (본청) 제도적으로 밀접한 통관 · 감시 통합운영, ‘물류기획’ 및 ‘안전관리’ 기능 강화



- ◆ (세관) 통관 · 감시 재정립에 따른 변경, 세관단위의 선별 · 위험관리 전담조직 마련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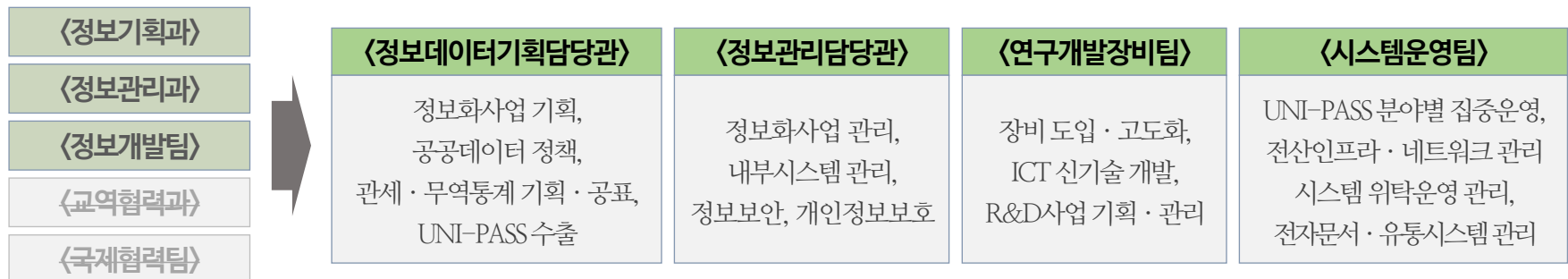
관세데이터 정책, R&D 및 정보화사업을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디지털 컨트롤타워

- ◆ 협력 업무와 섞여 있었던 정보화 · 데이터 업무를 분리하고, 통계 기능을 통합하여 관세행정의 모든 데이터를 총괄하도록 개편

* '98년 외환위기 이후 '작은정부' 기조에 따라 '정보관리관 + 협력국' 통합 → 정보협력국('99년~)

이후 우리청 내부에서 '정보화'와 '국제협력'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 지속('02 · '04 · '12 · '13 · '17 · '18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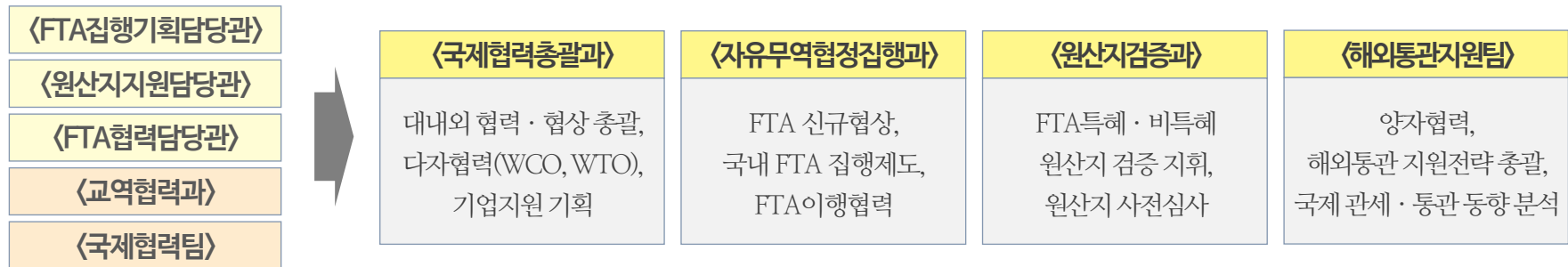
- ◆ 단년도 ICT 기술개발에 중장기 연구개발(R&D)을 보강하여 신기술 접목기반 구축
- ◆ UNI-PASS 집중운영 전담팀을 마련하여 시스템 관리 및 내부운영 역량 강화



분산되어 있던 협력기능(FTA · 非FTA)을 일원화, 관세행정 대외네트워크의 HUB

◆ (본청) 국제 세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대외교섭력과 기업지원 기능 강화

* 원산지조사(검증) 본청 업무는 외국세관 정보교환과 통상분쟁 대응의 효율성을 위해 대외협력 업무와 함께 배치



◆ (세관) FTA 및 해외통관과 관련된 기업지원 기능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집중



심사 개편안

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며, 불성실기업 및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

- ◆ (본청) 성실신고지원, 세원관리, 관세조사, 공정무역심사(유통관리·덤핑) 기능으로 구분재배치

〈심사정책과〉	➔	〈심사정책과〉	〈세원심사과〉	〈기업심사과〉	〈공정무역심사팀〉
〈세원심사과〉		성실신고지원 기획, AEO, 평가(ACVA), 수입세액 정산, 보정심사	세입예산·세외수입 관리, 징수운영, 세정지원, 품목분류, 수출환급	정기·수시 관세조사 지휘, 관세조사 정보 수집·관리, 기업 프로파일링	원산지표시 제도·단속, 유통이력제도·조사, 덤핑심사, 농산물 심사
〈법인심사과〉					
〈기획심사팀〉					

- ◆ (세관) ‘지원-강제’ 성격의 업무를 분리하고, 성실신고지원 업무를 강화

* 중복조사 최소화 및 사후심사 시너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국(과)에서 수행하던 원산지조사(검증) 기능을 심사국(과)로 이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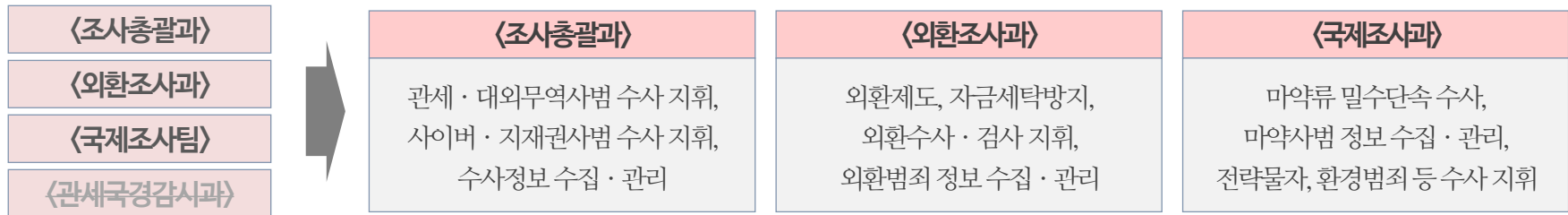
〈심사총괄과〉	➔	〈성실신고지원, 세원관리〉	〈관세조사등, 원산지조사〉
〈심사관〉		성실신고 지원, AEO AM·종합심사, 보정심사, 수입세액 정산제, ACVA 심사, 세원관리(환급, 체납, 기타민원)	정기·수시 관세조사, 쟁송, 유통이력조사, 원산지표시 단속, 원산지조사(검증), 사후관리, 덤핑심사
〈자유무역협정과〉			
〈수출입기업지원센터〉			

※ 업무성격에 따라,
조직을 분리·전담하여 운영
(서울 - 심사1·2국으로 분국,
그 외 - 과·계 단위)

조사 개편안

수사 업무의 기본기를 강화하고, 마약·디지털·환경사범 등 수사영역 확장기반 마련

- ◆ (본청) 감시업무와 분리하여 수사부서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화 하고,
국민안전과 밀접한 환경·마약범죄 수사력 강화를 위해 국제조사와 승격



- ◆ (세관) 지역별 수사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기구와 정원을 재배치하고,
디지털포렌식 전담팀을 신설하여 과학수사·정보분석 인프라 보강

